

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12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부모 이혼했어도 자녀는 엄마, 아빠 마음껏 볼 수 있어야”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 '23.11.15]
<https://www.donggong.com/news/Society/article/20231115/1221945021>

“"부모 5명 중 4명, 육아 조언 소셜미디어에 의존”

[동아사이언스, 문세영 기자, '23.11.20]
<https://www.donggong.com/news/News/sph92dx62519>

“이혼·돌싱에 사로잡힌 미디어... '건강한 가족' 콘텐츠 없다

[경향신문, 김보람 기자, '23.11.21]
<https://www.khncn.com/article/20231121580094>

“할마·할빠가 손주 키우면 月 30만원... 지자체가 주도하는 '돌봄수당'”

[조선비즈, 홍다영 기자, '23.11.27]
https://biz.chosun.com/topics/ttopics_s02/20231127/SX6RCOLYNH0JELUM6EDWZ1Y/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 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연합뉴스, 박원희 이혼서기자, '23.12.03]
<https://www.yonhap.com/view/AKR/202312024940002?input=1195fm>

“이혼 한부모 月 생활비 50만원... 자원연령 19~22세로 확대

[뉴스시, 김혜영 기자, '23.12.04]
https://www.newsis.com/view/231215NSX20231204_00025448868dID=102018pID=10200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 여가부·우리금융·전주교 협력 '우리원디태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0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682

“가족서비스 칸막이 없애고, 맞춤형 지원 늘린다

▶ 이기순 차관,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의견 청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0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683

“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 김현숙 장관, 5일(화) 도봉구 가족센터에서 센터장·면접교섭서비스 종사자 등과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0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684

“내년 긴급생계지원금 4인가구 183만3500원...1인가구는?”

[경향신문, 민사영 기자, '23.12.05]
<https://www.khncn.com/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2051200001>

“자녀양육 일상이 가족행복의 꽃이 되는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제도개선 사항 공유 및 상호 협력강화

▶ 우수 수기 공모전 수상자(36명), 우수 기관(35개 기관) 장관상 수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0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686

“대법 "기업, 육아 부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

[뉴스시, 하종민 기자, '23.12.10]
https://www.newsis.com/view/231210NSX20231209_00025520808dID=102018pID=10200

“'인구 감소'에 각국 출생률 높이기 비상

[서울경제, 백주연 기자, '23.12.11]
<https://www.seoulj.com/News/View/29YGXWZ218>

“모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가족센터

▶ '가족서비스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수기' 공모전 수상작 28점 발표

▶ '23년 가족센터 평가' 우수 기관·사례 시상 및 교류·소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1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698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 김현숙 장관, 12일(화) 호미래도시건설 방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1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703

“부자가족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모색

▶ 이기순 차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및 부자가족 의견 청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1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704

“양육비 안주고 버틴 130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 명단 공개(5명), 출금 금지(89명), 운전면허 정지(36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2.1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1d07mid=news4058bbt5n709707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제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 생활·돌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희의원 등 10인)	2023-12-08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청소년 보호·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의원 등 11인)	2023-11-2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부터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2. 9.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총액이 27,751,943원(27건)에 달하는 데도 전액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혜원의의원 등 12인)	2023-11-17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초·중·고등학교와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영의 규정에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처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11-16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12-06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폐지하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유사한 가족친화기업의 개발, 측정 및 공표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민의의원 등 10인)	2023-12-01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그 개념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을 적극 지원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명한 근로자에게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지 사업주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혜원의의원 등 12인)	2023-11-30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이하 '육아·돌봄지원제도'라 한다)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장 중 임시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6.5%,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리한 처우'는 전보·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지지 여부도 노동위원회 사법에서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돌봄지원제도의 사용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사용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결과와 사회적 지지가 유출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반된 차이가 있음. 이에 육아·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혜원의의원 등 12인)	2023-11-30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이하 '육아·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장 중 임시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6.5%,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사용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리한 처우'는 전보·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지 여부도 노동위원회 사법에서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명시적 재량 강화하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할 것으로 의제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민의의원 등 12인)	2023-11-22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2항 신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민의의원 등 12인)	2023-11-21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상·직무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가족이기는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시행 사업장별 공공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건강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부터 제83조제2항 신설).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내용	보도일	내용	기사링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디지털 가족서비스 제공 활성화 한다 - 온라인가족센터 등 가족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모두함께.com 운영 -	2023-11-30	시대와 이용자 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온라인 가족센터 운영과 아울러 기존 가족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모두함께.com	https://www.kihf.or.kr/web/lay1/bbs/S11104C105/A/15/view.do?article_s eq=11105858&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민이 궁금해하는 가족서비스 100 선정, 수어·개인과 공동체 - 장애인 가족 등 누구나 하나씩 살아갈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위한국민의견 반영 가족서비스 수어캐릭터 추진	2023-12-04	2022년 공공기관 최초 추진된 '누구나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서비스 수어캐릭터'는 디지털 및 음성정보 증가 대비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문 수어역역사의 수어 영상으로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https://www.kihf.or.kr/web/lay1/bbs/S11104C105/A/15/view.do?article_s eq=1115091&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가족관련 연구 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본 보고서는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공동체 및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미래형 이슈를 발굴하고자 했으며, 분석 과정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능형 알고리즘과 전문가 논의가 활용되었다. 주요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도시) 측면에서 변화를 이끄는 미래 이슈로서, '디지털 시대, 스마트 라이프'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미래와 '인공지능, Life Tech: 지능형 기술로 재해석하는 연결, 활동의 미래와 케어의 혁신' 등 11대 이슈를 제안하였다.	「Futures Brief 국회미래연구원, 23-117호, 2023. 10. 23.」 https://www.nafri.re.kr/new/report_d2?mode=view&articleNo=6112&article.offset=5&articleLimit=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과 그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2021년 청년사회경제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성차에 따른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에 유의하게 상반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에 유의하게 상반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족과 친구가 주는 정서적 지지가 여성에게 더욱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에서 청년들의 우울을 감소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서정연구 2023. 3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cleView.kci?SereArticleSearchBean_artid=ART003001687
상당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개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고충 등 업무상·직무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가족이기는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시행 사업장별 공공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건강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부터 제83조제2항 신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0호, 2023. 10. 한국콘텐츠학회」 https://www.dobja.co.kr/publication/Detail?nodeId=NOD11556040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대광역시 중심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전국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시의 7개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2,151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역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층 삶의 만족도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 각 지역에 효과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국회미래전략 Insight, 국회미래연구원, 83호, 2023. 10.」 https://www.nafri.re.kr/new/report_d2?mode=view&articleNo=6424
가족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존재한다고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빈도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단선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점적·복합적인 빈곤의 현황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한부모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모든 지표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산 빈곤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였음. -또한 이러한 수치를 대응으로 경험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한부모 가구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대다수였음. 특히 건강이 취약한 경우 사회적 돌봄이 미흡하다는 것이 거의 불가피하게 언급되었으며, 양부모 가족은 돌봄 빈곤 경험에 긍정적 상호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6개 지원별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각 차원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도 지원이 전하지는 않지만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호연관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지원 강화 및 행정적 극복해야 하고, 한부모 가구에 통합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같은 국가 신설 정책이 있음을 제안함.	「KWDI 이슈페이퍼 2023. 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3113062	
	돌봄 직종 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일자리로의 '고진로(high-road)전략' 추구 필요	본 연구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가치, 직업으로서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일반인 10,27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미래에 돌봄을 받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돌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남녀노소 직업별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다른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광역도시 및 교육 동 공영의 돌봄직종에 비해 간접인·요양보호사·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 등 협의의 돌봄 직종은 낮은 가치에 걸맞는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직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돌봄 직종에 대한 사회적 불인식 대응하여 돌봄서비스 질 제고, 돌봄직종별 격차 해소와 돌봄일자리로의 '고진로(high-road) 전략' 추구, 돌봄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에 대한 재정부자 확대와 국가책임성 강화를 제안하였음.	「KWDI 이슈페이퍼 2023. 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3113182